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1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20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33위 61점으로 역대 최고(21.1.28)
- ②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바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21.1.5)
- ③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국민권익위가 바꿉니다(21.1.8)
- ④ 2020년 국민의 생활을 바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10선(20.12.21)
- ⑤ 뇌물위험매트릭스서 "한국 194개국 중 22위 뇌물위험도 매우 낮음" 평가(20.12.10)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 → 청렴자료실 → 청렴정책 일반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044-200-7619)

2020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33위, 61점으로 역대 최고

- 국민권익위, 20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위해 정부 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 개혁 노력 지속 -
(2021. 1. 28, 국민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지난 1월 28일에 발표한 20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고, 국가별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했다.

평가점수는 전년대비 2점 상승, 국가별 순위는 6단계가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 52위(53점)에 이어, 2017년 51위(54점), 2018년 45위(57점), 2019년 39위(59점)를 기록, 4년 연속 상승하여 금번에 33위에 위치했다.

국가청렴도(CPI)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3대 지표*중 하나이기도 하다.

* 3대 지표 : TI '국가청렴도'(CPI), OECD '더 나은 삶의 질 지수', OECD '정부신뢰도'



이번 평가 결과의 상승 요인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부터 보여준 정부의 반부패 개혁 의지와 노력이 대내외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등 범국가 반부패 대응 체계 구축 ▲코로나19의 K방역 성과,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성공적 개최(‘20.12.1~4) 등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립, 「청탁금지법」의 정착 등 반부패 법·제도 기반 강화 ▲채용비리 근절, 공공재정 누수 방지, 유치원 3법 개정 등 국민 체감형 부패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 등 반부패 개혁 노력들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된 CPI 평가 결과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고,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에 진입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라며,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온 정부의 반부패 개혁의 노력과 성과가 반영된 것이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정부신뢰도 제고,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제정 등 반부패·공정개혁 노력을 가속화하고, 관계 부처는 물론 국민들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22년까지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반부패 과제들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1.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청렴기준 강화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연내에 제정하여 그간 추진한 반부패·공정개혁 입법의 완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등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한다.

또한, 청렴한 사회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선출직·고위 공직자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을 확대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2.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

고위공직자 부패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접수된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 신고는 공수처 등에 고발·이첩하고,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의 지원 등 국민권익위와 공수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권력형 부패를 엄단한다.

아울러, 그간 이슈가 되어 왔던 지자체 부패 취약분야의 집중적 실태 점검과 개선대책 마련으로 지역의 구조적 부패 관행들을 근절한다.

3. 대외 신인도를 저해하는 부패·불공정 관행 개선

정부 신뢰를 저해하는 민·관 유착 등 불합리한 관행과 청렴 경영과 관련된 민간 분야의 중요한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이러한 개선 과제들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정책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과정과 이행상황도 내실 있게 점검한다.

4. 사회전반의 반부패·공정 문화 확산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고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先 보호 - 後 검토’ 체계를 정비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 보호 정책을 마련한다.

붙임 1

국가청렴도(CPI) 개요 및 현황

< CPI 개요 >

- 발표기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 소재)
- 국가청렴도 개념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공공·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반부패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유용한 도구로 평가됨(1995년부터 발표)
 - ※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100점 만점)
- 조사대상 : 180개국(매년 변동)
- 조사방법 :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와 애널리스트 평가 결과를 집계
 - ※ 한국은 9개 기관 10개 지표
 - 기업인 설문자료 : 3개(IMD, WEF, PERC)
 - 전문가 평가자료 : 7개(EIU, PRS, WJP, IHS Markit, BF 변혁지수·지속가능지수, V-Dem Institute)

□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1점, 180개국 중에서 33위(상위 18% 수준)

○ 전년대비 2점·6순위 상승, 역대 최고 점수 기록(95년~), 30위권 초반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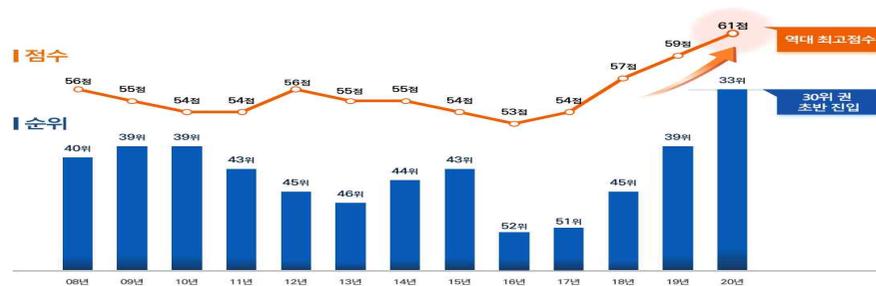
⇒ 특히, 작년 59점에서 1년만에 다시 61점으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하였음

※ OECD 37개국 중에서는 23위로 전년대비 4단계 상승하였고, 폴란드, 체코, 이탈리아, 그리스 등이 우리보다 후순위(OECD 평균점수는 66.9점)

<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변동 추이('08~'20년) >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점수	5.6	5.5	5.4	5.4	5.6	5.5	5.5	5.4	5.3	5.4	5.7	5.9	6.1
순위	전체	40/180	39/180	39/178	43/183	45/176	46/177	44/175	43/168	52/176	51/180	45/180	33/180
	OECD	22/30	22/30	25/33	27/34	27/34	27/34	27/34	28/34	29/35	29/35	30/36	23/37

※ '12년 100점 만점으로 변경



붙임 2

'20년도 국가별 국가청렴도(CPI) 현황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1	덴마크	88	48	도미니카	55	
3	뉴질랜드	85	49	체코	54	
	스위스					
	핀란드					
	싱가포르					
7	노르웨이	84	52	그레나다	53	
8	네덜란드	82		이탈리아		
9	독일	80		몰타		
	룩셈부르크	80		모리셔스		
11	호주	77	57	사우디아라비아	51	
	캐나다					
	홍콩					
	영국					
15	오스트리아	76	59	말레이시아	50	
17	벨기에	75	60	나미비아		
	에스토니아					
19	아이슬란드	74	59	그리스		49
20	일본	72	60	아르메니아		
	아일랜드					
21	아랍에미리트	71	63	요르단	47	
23	우루과이	69		63		슬로바키아
	프랑스					
24	부탄	68		67		벨라루스
25	칠레	67	67		크로아티아	
	미국					
27	세이셸	66	69		쿠바	44
28	대만	65		상투메프린시페		
29	바베이도스	64		69	몬테네그로	
30	바하마	63		75	세네갈	
32	카타르	62	78	불가리아	43	
	스페인					
33	대한민국	61		78		헝가리
33	포르투갈	61		78		자메이카
35	브루나이 دار루살람	60	83	루마니아	42	
	이스라엘					
	리투아니아					
	슬로베니아					
40	보츠와나	59	86	남아공	41	
	세인트빈센트					
41	카보베르데	58		75		튀니지
42	코스타리카	57		92		가나
	키프로스					
45	라트비아	56	75		몰디브	
	조지아					
45	폴란드	56	78	바누아투		
	세인트루시아					
			78	아르헨티나		
			83	바레인		
			86	중국		
			92	쿠웨이트		
				솔로몬제도		
				베닌		
				가이아나		
				레소토		
				부르키나파소		
				인도		
				모로코		
				동티모르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콜롬비아		
				에콰도르		

(다음페이지)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순위	국 가 명	CPI 점수	
94	브라질	38	137	도미니카공화국	28	
	에티오피아			기니		
	카자흐스탄			라이베리아		
	페루			미얀마		
	세르비아		파라과이	142	앙골라	27
	스리랑카		지부티			
수리남	파푸아뉴기니					
102	감비아	37	146	우간다	26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104	알바니아	36	146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6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149	카메룬	25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코소보			이란		
	태국			레바논		
111	베트남	35	157	마다가스카르	24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모잠비크		
	몽골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타지키스탄		
115	파나마	34	159	온두라스	22	
	몰도바			짐바브웨		
117	필리핀	33	160	나카라과	21	
	이집트			캄보디아		
	에스와티니			차드에리트레아		
	네팔			코모로스		
	시에라리온			에리트레아		
123	우크라이나	32	165	이라크	19	
	잠비아			아프카니스탄		
124	니제르	31	170	부룬디	18	
	볼리비아			콩고		
	케냐			기니비사우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29	멕시코	30	173	콩고민주공화국	17	
	파키스탄			아이티		
	아제르바이잔			북한		
	가봉			리비아		
134	말라위	29	174	적도기니	16	
	말리			수단		
	러시아			베네수엘라		
134	라오스	29	176	예멘	15	
	모리타니아			시리아		
	토고			소말리아		
			179	남수단	12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처럼 부패신고도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해져

- 부패·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유 및 책임감면 확대해 신고자 보호 강화 -
-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21. 1. 5,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공직자 및 공공기관 관련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사유와 책임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와 동일하게 부패신고자도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에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그동안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 신고에만 적용됐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면 신고자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욱 보호받을 수 있다.

또 부패·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원상회복 관련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부패신고나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구조금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피신고자가 신고자를 괴롭히기 위해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처럼 각종 민·형사상 쟁송절차에도 신고자는 변호사 수입료 등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는 신고 관련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형·징계’에 대한 감면만 받을 수 있었으나, 공익신고자와 같은 수준으로 ‘불리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경우도 각 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요구가 없더라도 스스로 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다른 기관이 할 수 없는 강력하고 다양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라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국민권익위가 바꿉니다

- 국민생각함에 개선 원하는 안전의 공감·호응 높으면
제도개선·정책제안 추진 -

(2021. 1. 8, 국민권익위)

앞으로는 ‘국민생각함’에 국민들이 제도개선을 위해 등록한 안전에 대해 공감과 호응이 높으면 실제 제도개선·정책제안에 반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8일부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이 제도개선을 원하는 안전에 대해 의견을 받아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리사회 불공정과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법령·제도, 정책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가 권고한 제도개선은 약 900여건으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 수용률은 95.3%에 달하며, 각종 법령과 조례, 지침 등을 개정·정비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국민 고충을 해소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동킥보드, 택배 노동자 권익보호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권익위가 바꿉니다!’ 항목을 신설했다. 국민들이 제도개선을 원하는 안전을 올리고 일정 수준 공감하면, 제도개선 추진을 신속하게 검토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민이 국민생각함에 게시한 안전 중 매달 가장 많은 참여·공감을 얻은 ‘이달의 국민생각’ 안전은 국민권익위가 검토결과와 추진방향을

국민생각함에 게시하고,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최종결과를 보도자료, 유튜브 답변 등을 통해 피드백한다.

이 과정에서 공감수가 다소 부족해도 부패예방과 고충해소를 위해 국민 입장에서 시급한 사안이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다수 국민이 문제를 지적한 안건 등은 국민권익위에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특정인의 처벌을 요구하거나 폭력·선정·혐오·차별적 내용을 포함하거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등 제도개선과 무관한 과제는 제외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제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개선하는 상향식(bottom-up) 국민참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국민의 생활을 바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10선

-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납부유예 ▲공공기관 비리임직원 성과급 지급제한 등 불공정·불평등 해소에 기여 -

(2020. 12. 2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 속 불공정 해소와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2020년 국민권익위가 추진한 부패방지·고충해소 제도개선 사례 10선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와 불공정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빈발하는 국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국민체감 효과가 높았던 제도개선 사례에 대해 작년 12월 8일부터 17일까지 1,503여명이 참여한 국민생각함 투표를 거쳐 선정한 대표사례를 소개한다.

#1. 소상공인 수도·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 ('20.5.25. 권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인 수도·도시가스 관련 국민부담을 완화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수도요금을 감면하거나 한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도록 해 광명시, 완도군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요금이 50~100% 감면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 사용자 부주의가 아닌 가스누출로 발생한 도시가스 사용요금을 감면하고, 요금 체납으로 중단된 공급을 재개할 경우 내야 했던 해제수수료도 폐지하도록 해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등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개정 완료됐다.

#2. 공공기관 비리 임직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제한 (‘20.10.12. 권고)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위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아도 성과급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철폐했다. 중징계 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등 5대 중대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는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인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청렴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콘텐츠 구독서비스, 구매만큼 해지도 쉽게 (‘20.5.11. 권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新소비문화로 급성장하고 있는 음악, 동영상, 도서 등 콘텐츠 구독서비스 플랫폼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부당한 자동결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를 구매했다면 PC가 아닌 앱으로 해지와 환불을 할 수 있도록 해 이용 절차가 보다 편리해질 예정이다.

#4. 가정폭력 가해자의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철저히 제한 (‘20.10.26. 권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나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주소를 알아내 2차 폭력을 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같이 사는 세대원 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을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도 금지했다.

#5. 아동급식카드, 편의점에서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게 (‘20.6.8. 권고)

결식아동에게 지원하는 아동급식카드 구입가능 품목을 대폭 확대해 구입 거절로 청소년이 낙인감을 겪는 사례를 해소했다. 그동안은

편의점에서 라면, 치킨, 음료수 등을 구입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입가능 여부가 달랐으나 지난 7월 결식아동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주류·담배, 초콜릿·사탕, 양념류 등 일부 제한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6. 국가자격시험 1차 불합격인데 2차 응시료는 안 돌려준다고? (‘20.9.21. 권고)

국가자격시험 1, 2차 응시수수료를 통합징수하면서 1차 미통과자도 2차 시험비용을 부담해야 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했다. 앞으로 세무사 등 21종의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차수별로 구분징수하고, 공인회계사 등 37종의 자격시험과 관련해 가족 사망 등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하면 응시수수료를 환불할 예정이다.

#7. 공공 문화시설 대관 특혜, 과도한 취소 위약금 개선 (‘20.9.7. 권고)

공연·전시 등 공공문화시설 대관 과정의 청탁·특혜를 방지하였다. 특정단체에 대한 우선대관 특혜를 폐지하고, 대관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대관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대관취소 위약금, 계약 보증금을 합리적으로 제한해 코로나 19에 따른 공연·문화계의 어려움 해소가 기대된다.

#8. 가격은 잡고 품질은 올리고 선택은 넓히고, 교복구매 개선 (‘20.7.20. 권고)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느꼈던 불편을 해소했다. 여학생이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교복셔츠 등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대한 과도한 비용책정도 금지해 내년 신학기부터 학생들이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교복을 입을 수 있게 된다.

#9.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이제는 그만 (20.4.20. 권고)

휴직교원의 조기·일시복직으로 인한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 관행을 개선했다. 기간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해 조기복직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계약해지 조항을 폐지하고, 해고 예고와 퇴직금 지급 절차를 체계화하도록 함에 따라 기간제 교원 중도해고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선이 사라질 예정이다.

#10. 갑작스런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보육공백 이제는 그만 (20.5.11. 권고)

어린이집이 갑자기 폐원하면서 다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소가 어려웠던 학부모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어린이집을 폐원할 때 학부모에게 폐원사실을 먼저 통지해야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폐원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입소대기 신청 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하도록 했다. 제도개선 이행을 완료하면 어린이집 폐원과정에서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패·불공정을 개선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의 효과를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아직 이행이 안 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행현황을 점검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RACE 뇌물위험매트릭스서 “한국 194개국 중 22위, 뇌물위험도 매우 낮음” 평가

- 주관적 인식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 기반 부패지수, 한국 4년 연속 순위 상승 -

(2020. 12. 10, 국민권익위)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2020년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94개국 중 22위, 100점 만점에 20점(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 2019년 23위에 이어 올해 22위로 매년 상승했다. 특히 뇌물 위험도는 2019년 ‘낮음’에서 올해는 ‘매우 낮음’으로 평가받았다.

※ 매우 낮음(1~21점), 낮음(22~37), 보통(38~55), 높음(56~73), 매우 높음(74~100)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 운영 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TRACE는 뇌물위험을 계량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평가요소(20년 기준 59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뇌물위험 매트릭스를 2014년부터 격년으로 발표했다. 2017년부터는 원천 데이터 범위 확대 등 방법론을 개선한 후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매트릭스는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두거나 명확하게 정의된 구체적인 내용의 질문지 분석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그동안 전문가나 기업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했던 기존의 국가청렴도(CPI)와 대비돼 주목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최근 몇 년간 CPI 등 다른 국제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진전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제투명성기구(TI)와 공동 개최해 성공리에 끝난 국제 반부패회의(‘20.12.1.~4., 온라인 비대면화상회의)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UN) 등 세계 반부패 포럼과 회의체에서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세계와 공유해 인식 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국제지표에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대응한 반부패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